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 학위 논문

사기범죄 피해 요인에 대한 연구

- 피해자의 특성과 신뢰를 중심으로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정 원

사기범죄 피해 요인에 대한 연구

- 피해자의 특성과 신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금 현 섭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정 원

김정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최 병 선 (인)

부위원장 박 순 애 (인)

위 원 금 현 섭 (인)

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사기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사기 범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해자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그러나 사기 범죄는 범죄 수익의 회수율이 낮고 피의자를 검거할 확률이 다른 범죄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 피해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활동 이론이나 생활양식 이론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연령·성별·직업유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신뢰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이익을 독립변수에 추가로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로는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양적, 질적인 면에서 측정하여 독립변수와의 그 관계를 탐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범죄 피해의 양적 심각성인 피해 금액과 독립변수와의 관계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범죄 피해의 질적 심각성인 수사 결과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는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위 연구 모형에 근거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연령, 성별, 직업) 중 직업과 연령이 범죄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피해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사기죄 피해 정도가 심각하였다. 둘째, 피해자가 고령일수록 이들은 공식적 신뢰보다는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는 것이 나타났다. 공식적 신뢰는 차용증, 계약서 등과 같이 법적 권위에 근거하는 반면, 비공식적 신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비공식적 신뢰의 양태는 단순 지인관계, 직장동료, 연인, 계,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연고 집단에 근거한 신뢰 유형이 고령의 피해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는 범죄 피해의 질적, 양적 심각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취약 계층의 범죄 피해는 경제적 양극화와 연관성이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들의 직업이 무직이거나 일반 주부들의 범죄 피해가 직업이 있는 사람들보다 피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들은 소득수준이 낮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의 피해자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둘째,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 피해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의 이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 사기에서 발생하는 노인 피해자들은 주로 1인 가구들이 많았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과 분리되어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사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과 같은 범죄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비공식적 신뢰를 지양해야 한다. 연고 집단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비공식적 신뢰는 내부 지향적이며 네트워크의 배타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사기 범죄는 주로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를 기반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범에 대하여 연고 집단 등과 같은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적 권위가 있는 공식적 신뢰의 구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 사기, 범죄 피해자, 공식적 신뢰, 비공식적 신뢰,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피해의 심각성

학 번 : 2014-23676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7
제1절 사기죄에 대한 개념적 정의	7
1. 사기죄의 개념	7
2. 취약계층에 대한 사기범죄 피해	8
제2절 범죄요인과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10
1. 범죄 요인에 대한 연구	10
2. 피해자에 대한 이론적 연구	11
1) 피해자 유발 이론	12
2) 상황적 전이 이론	13
3)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일상활동 이론	14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16
5) 소결	16
제3절 신뢰에 관한 연구	18
1. 선행연구	18
2. 신뢰의 정의와 연고 집단	19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및 연구의 방향	21
제3장 연구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22
제1절 변수 선정	22
1. 자료 출처 및 수집 과정	23

1) 연구대상	23
2) 연구자료 및 자료수집 절차	25
2. 종속 변수의 정의와 측정	27
1) 사기죄 발생	27
2) 사기죄 발생 피해	28
3. 독립 변수의 정의와 측정	29
1)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요인의 측정	29
2) 피해자의 신뢰의 측정	29
3) 연고 집단	31
4) 기타 변수의 측정	32
제2절 연구분석	32
1. 연구 모형	32
2. 연구 가설 설정	33
3. 연구 분석 방법	35
제4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38
제1절 기술통계분석	38
1. 종속변수 기술통계분석	38
2. 독립변수 기술통계분석	41
1)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41
2) 피해자의 신뢰유형	43
3. 기타변수 기술통계분석	45
제2절 이변량 분석	46
1. 범죄피해의 양적 심각성과 그 요인	46
2. 범죄피해의 질적 심각성과 그 요인	50
제3절 회귀분석	52
1. 다중공선성 진단	53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4
3. 선형 회귀분석결과	57
4. 가설검정과 해석	59
5. 사례 분석	60
제5장 결론	65
제1절 연구의 시사점	65
제2절 연구의 한계	68
제3절 결어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5

표 목차

표 1 집단의 구분과 연고 집단의 정의	21
표 2 변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22
표 3 연고 집단 변수설정	31
표 4 변수 및 분석 방법	36
표 5 사기 피해 금액(단위별)	39
표 6 사건 수사 결과	40
표 7 피해자의 성별	41
표 8 피해자의 연령층	42
표 9 피해자의 직업	43
표 10 피해자의 공식적 신뢰	44
표 11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	45
표 12 사기 피해 유형	46
표 13 피해자의 성별과 피해 금액	47
표 14 피해자의 연령층과 피해 금액	47

표 15 피해자의 직업과 피해 금액	48
표 16 피해자의 공식적 신뢰	49
표 17 피해자의 연고 집단	49
표 18 연고 집단 유무에 따른 피해금액 차이 검정	49
표 19 피해자의 직업 유무에 따른 수사 결과	50
표 20 피해자의 연령층에 따른 수사 결과	51
표 21 공식적 신뢰 유형에 따른 수사 결과	51
표 22 비공식적 신뢰 유형에 따른 수사 결과	52
표 23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54
표 24 로지스틱 분석 결과	56
표 25 선형회귀분석 결과	58
표 26 신뢰 유형에 따른 사례 분석	60

그림 목차

그림 1 최근 10년간 사기범죄 발생 건수	2
그림 2 고소사건 처리 절차	25
그림3 연구모형	3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이다. 예를 들면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사업 동업자 중 한쪽이 거짓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수리공을 가장하여 수고비를 명목으로 점원에게 현금을 받아 달아나는 경우 등이 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고, 사실상 사기를 당한 다음에도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에서 사기 범죄는 2010년(20만5913건)부터 2013년(27만1275건)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사기 사건은 전국적으로 24만4008건이 발생하였다.¹⁾ 하루 평균 668건,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분마다 한 건씩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 예컨대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폭행, 강간, 절도 -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사기범죄의 증가세만이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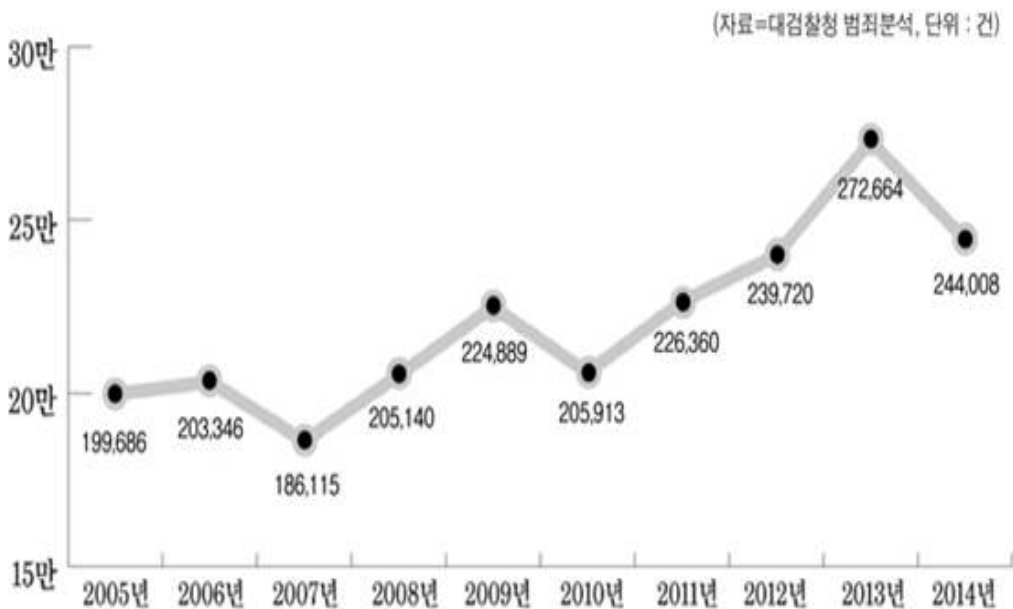
하지만 사건의 발생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사기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성이 크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의자 검거율은 연평균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이 9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범죄수익 회수율 역시 1%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사기 피해 총액 8조원 가운데 회수된 범죄수익은 약 730억 원이 전부다. 피해 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건도 15만6334건(64%)이나 됐다. 즉 사기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피의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우며,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종종 대형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다. 예컨대 35만 여명의 피해자들이 연루되고 총 피해금액이 4조원에 이르는 제이유

1) 경찰청, 2010-2015, 경찰백서

(JU)그룹의 ‘주수도’ (2006년) 사건, 21세기 들어 최대 사기 사건으로 알려지고 자살한 사기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피해금액이 5조 원대의 ‘조희팔 사건’ (2008년)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형 사기범죄는 소위 ‘폰지 사기’ 라 불리는 사기 범죄로, 찰스폰지(Charles Ponzi 1882-1949) 라는 희대의 사기꾼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이다. 그의 범행 수법은 원금을 50%를 45일 후에, 90일 후에는 원금의 100%의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폰지는 엄청난 투자자와 막대한 자금을 모아 명사가 되었으나 다음 해인 1920년에 파산한다. 이처럼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자들 간에 혈연·지연 등 연고를 매개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다.

<그림 1> 최근 10년간 사기범죄 발생 건수



사기 범죄피해는 특히나 노인이나 주부와 같이 취약 계층에 대한 사기 범죄 피해가 두드러진다. 61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 2011년 7만 6624건에서 지난해 13만6839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건수가 175만2598건에서 177만8966건으로 2만 5000여건 정도 소폭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족과 지역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독거노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은 심화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 피해는 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기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피의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우며,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악질 사기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형사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제재로는 유효한 대처를 할 수 없다. 일반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미연의 방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예방 측면에서 형사사법 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요인이 사기 피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그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선 사법·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사기죄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회수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기죄의 가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학계의 연구와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과 행태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죄에 대한 여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사기죄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존 범죄학 연구에서는 사기죄는 주로 ‘가해자’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논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 사후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주로 논의해왔다. 즉 가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장과 역할은 주된 논의대상이 아니었다. 드라마나 범죄 관련 프로그램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디어에서도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 보다는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범죄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잠재적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고, 일반시민이 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과 가족이 범죄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의 문제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범죄자의 동기나 처벌, 범죄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사기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범죄를 설명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는” 피의자의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재물을 교부 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두 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자발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사기죄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통념상으로 봐도 아무런 신뢰관계도 없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역할,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가 범죄 발생에 있어서 한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사기 범죄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파고드는 범죄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신뢰를 범죄와 관련된 요인으로 설정할 것이다. 기존의 사기 범죄 연구에서 사기죄는 주로 ‘기망자’를 중심으로 기망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뢰’를 중심으로 이러한 신

뢰가 범죄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신뢰의 형태가 범죄의 질적, 양적 심각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 성별, 연령, 직업, 교육 수준 등 - 에 따라 범죄 피해의 차이가 있는지, 특히 피해자의 신뢰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러한 요소들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기 범죄의 증가는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건전한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성되는 신뢰의 형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의 신뢰가 단순히 헛된 믿음일 뿐인지, 이러한 신뢰가 어떤 점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러한 신뢰의 근거는 사후에 피해구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범죄가 나타나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사기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기범죄 발생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사기범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사기범에 대한 수사기법 및 수사기관의 대응 방법, 사기 범죄 실태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다만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규범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논의한 연구가 있었다. 안동준(2005)의 연구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범죄피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범죄’ 자체에 대한 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억제력(경찰 인력)’, 경제적 요인(실업,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인구사회학적

원인(외국인 등)’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 모든 범죄를 기준으로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각각의 범죄별로 상이하게 작용하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기 범죄라는 구체적인 범죄를 연구 주제로 하여 범죄 전체에 대한 기존의 포괄적인 논의에서 좀 더 논의를 구체화 하였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으면 사기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에 대한 신뢰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범죄 통계만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과의 면접을 통하여 질적인 자료를 사용하거나, 대형사기 사건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범죄 현상을 단순히 통계분석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범죄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일정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기 범죄 요인을 탐색하여 범죄 예방의 기초를 확립하여 수사 기관 및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범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의의가 있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사기죄에 대한 개념적 정의

1. 사기죄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개념을 규범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구성 요건을 토대로 이러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위 내용 중 핵심 요소는 ‘피의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 피의자의 재산상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해 거짓말이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이 기망행위라는 뜻은 아니고, 거짓말의 내용·대상·방법·정도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거짓말)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이며,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이며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기망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망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기망행위의 정도는 경험칙상 일반인을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여야 한다. 즉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거짓말이면 족하다.

피해자의 착오란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사기죄에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또한 기망자의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이며, 처분행위에 의해서 착오와 재산취득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마지막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필요설과 불요설, 이분설 등이 대립되어 있으나 사기죄가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필요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피의자의 거짓 말에 속은 피해자가 재산상의 처분을 하고, 이로써 피의자가 이득을 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이득은 금전적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사기범죄 피해

본 연구에서는 계층별로 범죄피해 유형, 신뢰의 유형을 살펴볼 것이며 특히 연령에 따른 범죄 피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피해자의 연령과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인의 범죄 피해 및 미성년자의 범죄 피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본 연구 대상인 사기 범죄는 금전적인 재산을 전제로 하기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보다는 수입이 있고 목돈을 모아둔 중년층 이상이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범죄 취약 계층 중에서도 미성년자보다는 중년층 및 노인의 범죄 피해를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인 범죄 피해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정의해야 할 것은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개념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연령층을 지칭할 것인 바, 과거보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노화가 지연되면서 약 65세를 노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노인 연령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노인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26조 경로우대 조항에 의거 65세가 노인 연령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연금법에서는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설정하고, 국민연금은 만60세 이상이다.

경찰 관서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 5년 단위가 아닌 10년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도 오랫동안 만 60세를 연령층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에 관한 공식통계는 만 60세를 연령층 분류 기준으로 집계할 것이다.

노년층은 지적 능력이 저하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보다 범죄에 취약하다. 또한 노인이 범죄대상이 되기 쉬운 이유로는 사회나 가족과 고립되어 지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노년층에 대한 사기범죄 피해에 주목하여 이들이 취약한 범죄 유형은 무엇이며, 이들이 피의자에 대하여 어떤 유형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노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로는 이건중·정영실의 “노인의 범죄 및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1995)가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65년부터 1992까지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하여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 추세 분석하였다. 약 200명의 노인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분석하여 노인피의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서울시에 60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실태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허경미(2004)의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1995-2001년 공식범죄통계를 사용하여 노인의 범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피해 대책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형법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기나 절도범죄 피해가 집중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허경미(2006)의 “도시 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2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산피해와 폭력피해별 범죄피해의 원인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분석 실시하였으며, 재산범죄 피해에서는 피의자와의 근접성이, 폭력범죄 피해에서는 범죄대상자의 매력성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 범죄 피해 예방대책으로서 피의자의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환경적 정화노력 강조하였다.

장준오(2009)의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에서는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왜 저지르는지, 노인이 당하는 범죄피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범죄피해의 분석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피해 경험이 낮아졌다. 또한 최종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직업이 있고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범죄 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유지웅(2015)의 “노인 사기범죄 피해 분석과 대응방안”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 범죄통계 분석과 기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노인의 사기범죄 피해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상의 시사점을 찾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박상진(2015)의 “불법다단계·유사수신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에서는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유사수신 사기의 실태와 수사기관의 대응책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절 범죄요인과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범죄 요인에 대한 연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 신뢰에 대한 연구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범죄 요인에 대한 연구

먼저 범죄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범죄추세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로 1) 인구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범죄 통제적 요인, 4) 정치적 요인, 5) 경찰 정책적인 요인들을 지목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요인은 실업률, 빈부격차,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범죄율에 대한 직접적 통제적 요인으로 경찰관 수, 경찰예산, CCTV, 경찰 검거율의 효과, 경찰의 단속의 성과 등을 검증하였으며, 시계절적으로 인구적 요인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있었다. 경찰청장의 정책적 의지, 청장이 관심이 갖는 통계는 매년 감소한다는 주장 등 경찰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계가 결정된다는 다소 회의적인 연구도 있었다.²⁾

하지만 위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은 범죄의 유형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예외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구가 공식 범죄 통계를 가지고 범죄의 추정량을 기준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의 한계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찰의 범죄통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찰 통계자료만으로는 범죄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별 범죄 자체에 대한 논의는 그 범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규범적인 관점에서 법적 대책에 대한 논의,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범죄 실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의 동기나 원인을 설명하는 주체를 가해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을 검증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범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

최근에는 다양한 범죄피해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나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신뢰가 범죄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2. 피해자에 대한 이론적 연구

초기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대표적인 범죄학자로 멘델손(Mendelshon)이 있다. 그는 범죄의 발생상황에서 피해자의 역할

2) 탁종연(2011), 경찰의 정책결정이 절도범죄통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에 주목 하였다.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범죄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유발 이론은 범죄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특히나 여성 및 범죄에 취약한 피해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학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고, 가해자 중심의 이론에서는 배제되었던 중요한 요인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피해자 이론에는 1) 피해자 유발 이론, 2) 상황적 전이 이론, 3) 생활양식/노출 및 일상활동 이론,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이 있다.

1) 피해자 유발 이론

초기 피해자 유발 이론은 살인, 폭력, 강간 사건 등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올프갱(Wolfgang)의 연구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상당수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먼저 사용하여 살인이라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유발이론(victim-precipitated theory)은 범죄사건, 특히 폭력범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해자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강간 사건의 경우 강간 피해자 여성의 책임과 관련 오랜 논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아미르(Amir, 1967)는 600건의 강간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20%는 ‘나쁜 평판(bad reputation)’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Black, 1983) 역시 상당수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살인이나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를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한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한다고 보았다.

피해자 유발이론(victim-precipitated theory)은 범죄사건, 특히 폭력범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해자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실제로 많은 폭력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 간에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피해자가 범죄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상황적 전이이론과 같이 범죄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노성호 외,

2012).

기존의 피해자 이론은 위와 같이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인 사기범죄에서도 범죄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상황적 전이 이론

상황적 전이이론(situated transaction theory)은 피해자 유발 이론에 영향을 받은 후속 이론으로, 일련의 경험적 연구와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 대표적으로 클렉과 맥엘라스(Kleck and McElrath, 1991)는 개인들 간의 관계가 적대적 혹은 위협적으로 진전되어 폭력 및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보고, 이를 ‘폭력의 위계’ (hierarchy of violence)’ 라고 불렀다.

루켄빌(Luckenbill, 1977)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70건의 살인사건을 분석하면서 ‘상황적 전이(situated transaction)’ 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 역시 다른 학자들과 유사하게 살인사건이 주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며,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인격 투쟁’ (character contes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인격투쟁이란 개인들 간의 갈등상황에서 당사자들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자신의 체면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중 남편이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여길 경우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폭력이나 살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켄빌은 많은 살인사건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며, 충동적인 살인 사건의 경우 이러한 여섯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치명적인 폭력이나 살인을 야기하는 원인은 모욕이나 체면과 같은 사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박순진, 1998:노성호 외, 2012).

상황적 전이이론 또한 피해자 유발 이론과 같이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 살인이나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주

목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이들간에 갈등이 상황적으로 전이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기 범죄의 발생 과정에 주목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하게 된 근거,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단순히 통계자료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요인과 범죄 발생 피해만을 연구했던 점에서 더 나아가 범죄가 어떻게 상황적으로 전이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일상활동 이론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학자들은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피해 가능성이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학자들 역시 범죄피해율이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변동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범죄피해를 인간생태학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범죄피해현상에 주목한 이들의 논의는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 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으로 불리면서 이후 범죄피해현상을 설명하는 주류 이론으로 부상하였다.

생활양식이론이 인구·사회적 특성이 따른 범죄피해발생의 차이를 설명하려 한다면,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율의 변화를 거시적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기회의 증가로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활양식/노출이론은 각 개인마다 성별, 연령, 수입, 교육, 직업 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expected role)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범죄피해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즉 선행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직업 활동 또는 여가활동 등 생활양식(lifestyle)이 시간과 장소에 따른 범죄피해위험의 ‘노출(exposure)’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의 ‘접촉(association)’ 빈도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범죄피해가능성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결혼한 가정의 남자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반면, 여자는 집

에서 아이와 남편을 보살펴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대역할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남자들의 바깥 활동이 잦아지고 그만큼 범죄피해에 노출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논리이다.

일상활동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세 가지 핵심적 요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은 ‘동기화된 피의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죄대상(suitable targets)’,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보호능력의 부재(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라는 세 가지 공간적, 시간적 요인이 수렴될 경우 ‘약탈범죄(predatory crime)’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이들은 1960년부터 1971년까지의 범죄율을 비교하면서, 원거리 출퇴근 증가(가구의 분화),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증가, 가전제품(TV, 카세트, 개인컴퓨터)의 소형화·경량화, 여가활동의 증가(가구 중심의 활동감소)와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범죄기회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았다. 이처럼 일상활동이론은 미국에서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하는 원인을 거시적 수준의 ‘사회변동(social change)’과 관련지어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하였다. 실제로 미이드와 동료들(Miethe, Huges and Mcdowell, 1991)은 미국 내 548개 도시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대중교통이용의 증가, 가구원 수의 감소 등이 범죄율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의 한계로는 개념과 측정 간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이론과 조사를 연결하는 측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념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공식통계 및 범죄피해조사 등의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론은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은 현대 범죄학 영역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클락(Clarke, 1992)이 처음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은 전 세계적으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상황적 범죄예방이란 “사회나 사회제도의 개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기회의 감소에 의존하는 예방적 접근”을 말한다(Clarke, 1992:4). 그는 상황적 범죄예방이 일상활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과 같은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범죄학 이론이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범죄란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나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동기와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는 매우 특정화된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설계함으로써 범죄행동에 따르는 노력과 위험은 증대시키고 보상은 낮추고자 하는 범죄기회의 감소전략을 중시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이 범죄예방 분야에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범죄의 일상성, 범죄 문제에 대한 정치적 반응, 소비자본주의의 발달과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 그리고 새로운 예방기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공학의 발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김성언, 2009: 1050)³⁾

5) 소결

사기범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이론적 분석틀로 사용될 이론은 생활양식 이론 및 일상생활이론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에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유발이론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와 가

3) 김준호 외 6명(2015), 일탈과 범죄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264-265

해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상황적 전이 이론은 지능범죄 보다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강력범죄를 설명하는 데 좀 더 부합한 것이라 생각된다. 상황적 예방 이론의 경우 ‘생태범죄학’, ‘환경범죄학’과 같이 상황적인 요소와 환경이 범죄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사기죄의 특성상 살인, 강도, 폭행 등과 다르게 시간과 장소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발생지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싱이나, 여러 군데 다단계 사무실을 두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투자 사기 등은 사실상 발생지가 범죄 관할에 있어 참고적인 사항일 뿐이다.

국내 일상활동이론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근접성, 노출, 보호능력, 매력성 등 네 가지 요인이 실제 범죄피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가구절도 및 개인절도 피해에 관한 연구(최인섭·기광도, 1998), 대학생들 대상으로 캠퍼스 범죄피해의 연구(박철현, 200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노성호·이성식, 2003)에서는 주로 노출과 보호능력이 범죄피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와 관련해 발표된 국내의 연구를 정리한 논문(박철현, 2004)에 따르면, 매력성과 보호능력의 부재는 가구범죄 뿐 아니라 절도·성폭행·살인과 같은 개인범죄에서도 일관되게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피해 대상이나 피해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매력성은 성인 보다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서, 재산범죄피해보다는 폭력범죄피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연령과 범죄의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일상활동이론에 관한 또 다른 연구의 방향은 범죄나 비행에 있어 피해-가해의 중첩에 대한 것으로써, 이러한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피의자의 일탈적 생활양식이 때로는 범죄피해자로서의 노출이나 매력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탈적 생활양식이란 범죄행동을 저지르거나, 금지된 약물을 남용하거나,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등과 같은 청소년에게 금지된 부정적 생활습관이나 일탈적 생활양식을 가진 친구까지를 포함한다.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폭력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낮선 사람인 경우가 많지 않다. 생활양식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은 가장 손쉽고 눈에 띄기 쉬우며 접근하기 쉬운 범죄의 목표는 바로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피의자는 가까운 친구의 일상생활과 취약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제3절 신뢰에 관한 연구

최근 10-20년 사이 신뢰라는 말은 학계와 정책분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신뢰는 경제적 성취의 기반이며,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고, 사회의 질서와 결속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되었다. 신뢰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혹은 제도에 대한 신뢰, 리더십과 결부되어 조직 내부에서 신뢰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다. 비교연구 측면에서 신뢰 개념과 발생 근거를 동서양을 비교한 연구도 있었고, 동아시아 국가 간 비교 연구도 있었다.

1. 선행연구

신뢰에 대한 연구는 먼저 한성열(2005)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에서는 한국 사회의 신뢰와 불신에 대하여 문화심리학적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의 신뢰는 혈연을 기초로 맺어진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을 중심으로 시장적 관계에서 형성된 서양의 신뢰와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 전통적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한국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아니라 신뢰부재의 사회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심리학적 연구는 이런 한국적 맥락에서의 신뢰를 고려하여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박희봉 외 1명(2009)의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신뢰를 개방적 신뢰 · 협소한 신뢰 · 정부신뢰 · 제도신뢰 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배적인 신뢰 유형을 구분하고, 국가별 신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사적신뢰와 수직적 신뢰가 높고, 일본이 일반신뢰가 높다. 그러나 일본 역시 학연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사적신뢰가 매우 높고, 시민단체 신뢰는 한국보다도 낮았다. 신뢰유형별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일반신뢰와 시민단체 신뢰 등 개방적 신뢰가 제도신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협소한 신뢰가 제도공정성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제도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적 신뢰가 필요함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신뢰와 지인신뢰, 연고단체 신뢰 등의 협소한 신뢰도 정부신뢰와 사회기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 있어서 아직도 협소한 신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신뢰구조가 개방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면을 보여주었다.

2. 신뢰의 정의와 연고 집단

신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 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 “로 정의하기로 한다.⁴⁾ 특히나 정부나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가 아닌 사적 집단 구성원 간의 신뢰를 살펴볼 것이다. 신뢰에 대한 이론은 신뢰의 내적 발생론과 외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신뢰가 어떠한 근거로 형성되는 지, 그리고 경제, 정치, 혹은 심리적 분야에서 이득을 발생시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 초점은 피해자의 신뢰의 발생 근거 즉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신뢰 집단의 정의를 위하여 유석춘(2002)의 ‘한국의 사회적 자본:연고 집단’ 연구에서의 분석틀을 참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연고 집단의 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신뢰라는 개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두 가지 기준을 채택하여 하나는 집단의 구성방식이 자원적인지

4) 이은죽(2004), 신뢰 :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 집문당, 24쪽

혹은 연고에 의한 것인지 이다. 다른 하나는 집단의 활동목표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 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혈연, 지연, 학연단체와 같은 연고 집단은 비자원적 집단의 구성방식을 따른다. 자원적, 공적 결사체는 시민단체, 자원적, 사적 결사체는 동호회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왕혜숙 외 2명(2008)의 연구에서는 연고 집단에 대한 기존의 비판론이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연고 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신뢰를 분석하면서 그 예로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비교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양측 모두 사회적 자본의 형태라는 점에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집합행동에서 나타나는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폐쇄성과 특정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내부적 신뢰를 이용하고 있었다. 동창회의 경우 강한 내집단 신뢰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오히려 신뢰 부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나홀로 볼링’의 저자 로버트. D.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bonding)과 연계형(bridging)”로 구분하였으며, 결속형 자본이란 사적 사회적 자본을,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란 공적 자본을 가르킨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나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 예컨대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묶인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내부 지향적이며 네트워크의 배타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저술하였다. 국내 일부 범죄학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사기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보다 개인 간 정(情)에 따라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미국·일본 등에 비해 사기 사건이 무척 많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고 집단에 신뢰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중 연고 집단은 사회 연결망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혈연, 지연, 학연,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 연고에 의하여 다양한 연결망이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관계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신뢰 - 연고 집단, 혈연, 지연, 학연 등 - 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분석할 것이다.

〈표 1〉 집단의 구분과 연고 집단의 정의

		집단의 목표	
		사적 관심	공적 관심
집단의 구성방식	자원적	유형 A(동호회)	시민단체
	비자원적	혈연, 지연, 학연단체(연고 집단)	

5)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및 연구의 방향

위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는 범죄 요인에 대한 연구,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 연구, 신뢰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기범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이론적 분석틀로 사용될 이론은 생활양식 이론 및 일상생활이론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사기죄의 피해자마다 성별, 연령, 수입, 교육, 직업 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다를 것이기에, 이를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이다. 즉 선행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직업 활동 또는 여가활동 등 생활양식이 시간과 장소에 따른 범죄피해위험의 노출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뢰에 대하여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다른 나라와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신뢰의 유형에 따라 범죄 피해 발생 양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5) 유석춘(2002), 한국의 사회적 자본: 연고 집단, 자유기업원

제3장. 연구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서 출발한다. 어떤 사람들이 사기 피해에 취약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같은 사기 피해자들이라 할지라도 사기피해가 심각한 경우 그러한 결과와 관련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연구 모형에서 사용될 변수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조작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기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신뢰의 유형을 사기죄 피해와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다소 탐색적인 수준의 연구이다. 본 연구의 변수와 그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변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	성별	피해자의 성별
	나이	피해자의 나이
	직업유무	피해자의 직업 유무
	공식적 신뢰	피해자의 공식적 신뢰
	비공식적 신뢰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
종속변수	기대이익	피해자의 기대 이익
	수사결과	피해의 질적 심각성
	피해금	피해의 양적 심각성

피의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는 성별, 나이, 직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피의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무직, 주부, 회사원, 자영업, 종교인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직업군을 직업 유무라는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피해자의 신뢰는 투자 계약서나 차용증과 같이 법적인 공신력이 있는 수단이 존재할 경우 공식적 신뢰가 범죄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가정하였다. 공식적인 신뢰 이외에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과 같은 연고 집단이 피해자의 신뢰 근거로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비공식적인 신뢰라고 가정하였다. 기대이익이란 피해자의 심리적 요소를 나타낸 것으로, 고이율의 배당 등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투자받는 유사수신 범죄와 같은 경우 등에 착안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1. 자료 출처 및 수집 과정

1) 연구대상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은 사기범죄 피해자와 사기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일선 경찰관서에 ‘사기’ 죄로 접수된 고소사건 중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기사건의 접수는 크게 두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우편 혹은 방문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다. 다른 한 가지는 피해자의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현장 경찰관이 사기 범죄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담당 수사과에 인계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사기죄의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피해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피의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담당 수사관과 같이 작성한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내용에 대한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형사법적인 배경지식이 없이 고소장을 적은 경우, 중요 범죄 구성요건이 누락되어 있거나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도 처벌해 달라는 취

지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 진술조서를 고소장에 보충적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고소장에 적힌 고소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후자의 사기 범죄는 112신고 등 초동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예컨대 편의점에서 피의자가 “지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편의점 현금 ATM 기계가 잘 되지 않는다. 여기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둔 메모와 반지 하나를 맡길 테니 5만원만 현금으로 주면 내일 바로 이체해 주겠다.” 라고 점원을 속여서 현금을 받은 이후에 바로 현장에서 달아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피의자가 밝혔던 인적사항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 대부분이며, 반지나 담보로 맡긴 물건도 가짜인 경우가 많다.

그 다음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판단을 한다. 만약 진술 다툼이 있을 경우 계좌입출금내역 등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수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다. 만약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일 시에는 기소중지(지명통보)의견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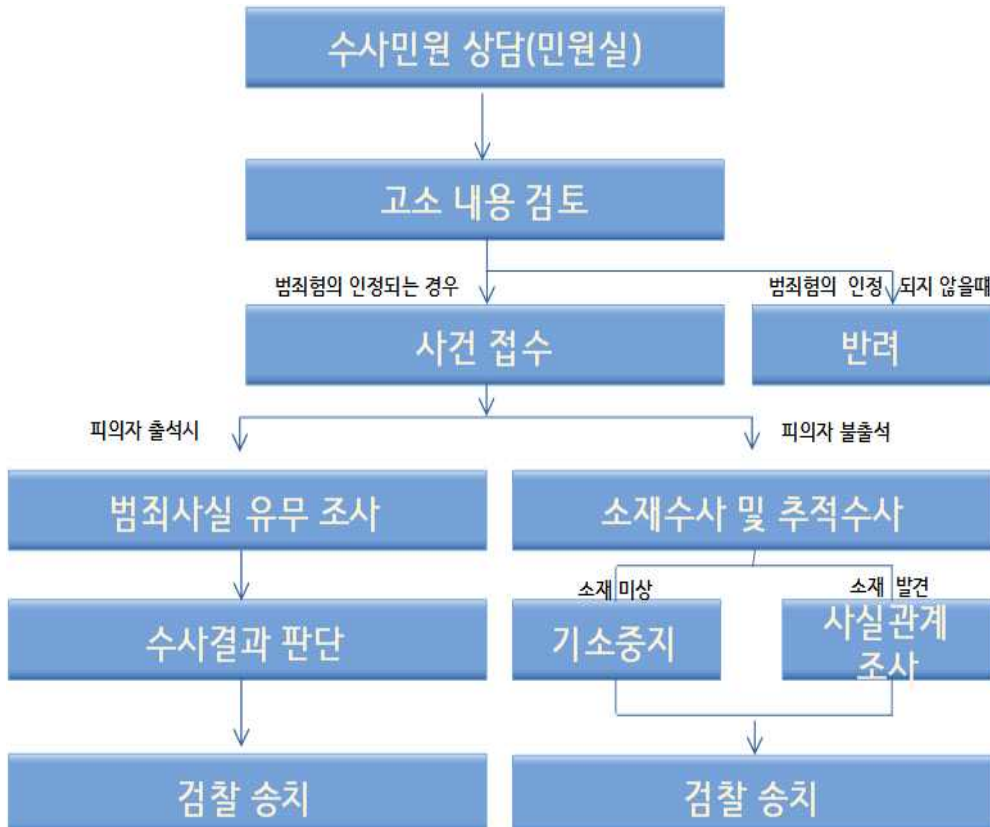
위에서 기술한 사기범죄 발생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경찰 관서에 사기 범죄로 접수가 되고, 일련의 수사 단계를 거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고소사건은 사건접수->고소내용 검토->사건수사->검찰송치 순으로 이루어지며 민원상담과정에서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형식요건을 결여한 경우(예컨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기타 형사소송법 상 고소의 제한규정 등) 반려를 하게 된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단순히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일 뿐으로 조서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은 없으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수사가 완료된 사건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며, 이에 피해자에 대한 인구·사회적 정보, 피의자와의 관계, 피해 사실 등이 담겨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기 사건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성별, 피해자의 신뢰, 피해자의 기대 이익을

분석하였다.

<그림 2> 고소사건 처리 절차



2) 연구자료 및 자료수집 절차

(1) 필요한 연구자료

이번연구에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 된 사기범죄 사건 정보, 피해자에 대한 정보(성별, 연령, 직업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 사기죄 유형 및 발생 형태에 대한 정보, 피해자의 신뢰에 대한 정보, 피해금액에 대한 정보, 수사결

과에 대한 정보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성별이나 연령, 피해금액, 수사결과는 경찰 통계 시스템에 기록이 되지만, 그 외 구체적인 사건 정보는 통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의자를 신뢰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적인 신뢰 통계로 나타나는 부분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직업은 경찰백서나 대검찰청 통계 자료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량 자료가 아니라 질적인 자료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나 피해자의 신뢰에 대한 정도, 수사 결과에 대한 정보 등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이상 구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담당하였던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에 대한 학술적인 목적에서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방법

일선 경찰관서 2016. 2. 부터 2016. 10. 31. 까지 경찰서 수사과에 접수된 ‘사기’ 사건 중 무작위로 100명의 피해자들을 추출하여 분석을 하였다. 시작 시점을 2월로 정한 이유는 대개 2월초에 경찰 인사이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설정하였다. 끝나는 시점을 10. 31. 로 설정한 이유는 경찰 조직 내에서 각 부서별 성과평가가 10. 31.을 기점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 범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변경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기간을 설정하였다.

일선 경찰관서는 서울 관악경찰서로 지정을 하였다. 서울이라는 표본을 선택한 이유는 한 나라의 수도 치안이 국가 전체의 치안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31개의 경찰관서가 있고, 그 중에서 서남부권 경찰서 중 하나인 관악경찰서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하나의 경찰관서를 가지고 일반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기범죄의 특성상 발생지 구분에 실익이 없고 접수 관서의 결정은 범죄 발생지, 피의자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⁶⁾ 사기 범죄 발생은 타 관서

6) 경제범죄 관할에 관한 지침(경찰청 내부자료)

에서 하였으나, 고소인이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피의자가 관악구에 거주할 경우 관악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위치에 대하여 편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경찰관서를 설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표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관악경찰서는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사기 사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1개 경찰관서 중에서 최상위권도 최하위권도 아닌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사건발생수가 많은 편인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의 경우 건수 자체가 다른 관서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도봉, 노원, 방배 경찰서의 경우 그 반대로 건수 자체가 다른 관서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관악경찰서의 경우 사건 자체로 보았을 때 많은 편이긴 하나, 위 언급된 관서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편향성이 적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기사건 피해자 100명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경제범죄 담당 수사관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서마다 직제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사건 부담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잡한 사안의 사건만을 맡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 기간 중 관악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가 완료되었던 사기 사건들 중 피해자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사건 정보 중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2. 종속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사기죄 발생

사기죄가 ‘발생’ 하였다는 것은 경찰관서에 접수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의미하며, 기소/불기소, 유죄/무죄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경찰관서에 접수되지 않고 반려처리 된 사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찰관서 접수단계에서 사기죄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거나, 전적인 민사사안으로 다른 구제 사안이 있는 등 반려사유가 있을

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기죄로 접수된 사건 중,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이며, 종국적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만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상태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

2) 사기죄 발생 피해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란 피해금액과 피해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피해금액이란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그 수단은 가리지 않으며 재산상의 이득이면 족하다. 예를 들면 현금, 어음, 수표, 채권, 기타 금융자산 등이 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수사시스템 내 발생원표를 작성해야 한다. 발생 원표 중에는 피해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여기에 입력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피해를 측정할 것이다.

피해의 심각성은 사기범죄 피해의 질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하였으며, 피해의 심각성은 수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았다. 즉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보다 사기 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60%를 넘지 않았다. 사기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⁷⁾ 이는 사기 범죄가 민사 분쟁 형 고소사건인 경우가 많고, 개인 간 재산분쟁에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기 사건일 지라도 질적으로 범죄 피해를 구분하기 위해서 수사결과라는 변수를 활용하였다. 즉 수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사결과가 기소가 될

7) 박강우, 이정민, 2001, 경찰단계에서 고소·고발제도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

경우 불기소의 경우보다 피해의 심각성이 질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사기범죄의 피해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각각 피해금액과 수사결과를 기준으로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3. 독립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요인의 측정

피해자의 인구·사회적적 요인이란 연령, 성별, 직업이 주된 요소이며 기타 요소로는 직업, 소득, 주거형태, 교육 수준 등이 있다. 다만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직업을 제외하고 다른 인구학적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구학적 요소는 사건을 마무리할 때 ‘발생 원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연령과 성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 인구·사회적 요소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가 경찰관서로 와서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상 나타나 있는데, 수사관의 재량과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령과 성별, 직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피해자의 신뢰의 측정

사기죄의 피해자란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기사건 중 재산상의 손해를 본 피해자를 의미한다. 사기죄는 대부분 고소사건이며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신뢰란 피의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된 근거이며 가해자에 대한 신뢰이다. 피해자의 신뢰가 어떠한 유형을 갖는지 어떤 점에 근거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분석할 것이다.

사기범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그러한 자료는 본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소명하는 차용증, 입금 확인증, 계약서 등이 있다. 이러한 소명자료는 형사상 피의

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추후에 피해자가 민사상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증거이다. 특히 이러한 차용증, 입금 확인증, 계약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일종의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명자료를 ‘공식적 신뢰’라는 변수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뢰가 공식적인 수단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신뢰를 공식적 신뢰변수로 설정하였다.

공식적 신뢰 외적인 요소로 피해자가 신뢰를 형성할 경우에는 비공식적 신뢰라는 변수로 정의하였다.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피의자의 유무죄 판단을 할 때 고려할 사항 중 하나로는 피해자의 신뢰가 어떠한 점에 근거를 하고 있는 지이다. 저자도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피해자는 피의자의 어떤 점을 신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나요?’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풍채가 좋고 믿음직해서’, ‘지인이 소개해서’, ‘같은 동향이라서’,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서’와 같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나 위 공식적 신뢰인 차용증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수단도 없이 단순히 연고관계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공식적 신뢰 수단이 없기에 피의자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사후 형사, 민사상 피해 구제를 받을 길도 막막해 진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신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식적 신뢰와 비공식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신뢰에 대한 근거는 수사 사건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 공식적인 신뢰가 비공식적인 신뢰가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신뢰 관계없이 순전히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전화통화로 비면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속칭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련의 신뢰관계 없이 순전히 가해자의 거짓말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3) 연고 집단

비공식적 신뢰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연고 집단’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는 학연, 지연, 혈연, 종교, 계, 지인, 직장 동료, 연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연고 집단은 비자원적으로 이루어진 사적 관심의 공동체이다. 변수 설정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3〉 연고 집단 변수설정

구분	변수
연고 집단	혈연, 지연, 학연, 종교, 계
비연고 집단	단순지인, 연인, 직장동료, 기타

학연과 지연의 경우 전통적인 연고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논의의 여지가 없다. 다만 종교와 계모임의 경우를 연고 집단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으로 지역 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시작되었기에, 지연과 속성이 유사하므로 연고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종교의 경우 혈연을 매개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교 집단 역시 연고 집단의 하나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 외 연고 집단이 아닌 경우는 단순 지인관계, 연인 관계,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가 있었으며, 비공식적 신뢰 관계가 없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혈연 관계가 비공식적 신뢰관계가 가장 강하고 단순 지인관계가 신뢰수준이 낮다고는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다른 비공식적 신뢰인 학연과 지연, 종교, 연인 등의 경우는 수치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비공식적 신뢰에 대하여, 이러한 신뢰 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연고 집단이라는 척도를 설정하였다. 연고집단 이외의 모든 관계는 비연고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고 집단의 여집합 변수로 설정하였

다.

4) 기타 변수의 정의

기타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및 피해자의 신뢰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기대이익에 대하여 추가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사기 유형 중 투자사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고이율의 상품을 미끼로 피해금을 편취한 경우가 주로 나타난다. 서두에서 언급한 ‘폰지사기’의 전형이다.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환산하여 변수를 설정하였고, 다만 피해자들의 기대이익이 미상이거나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기대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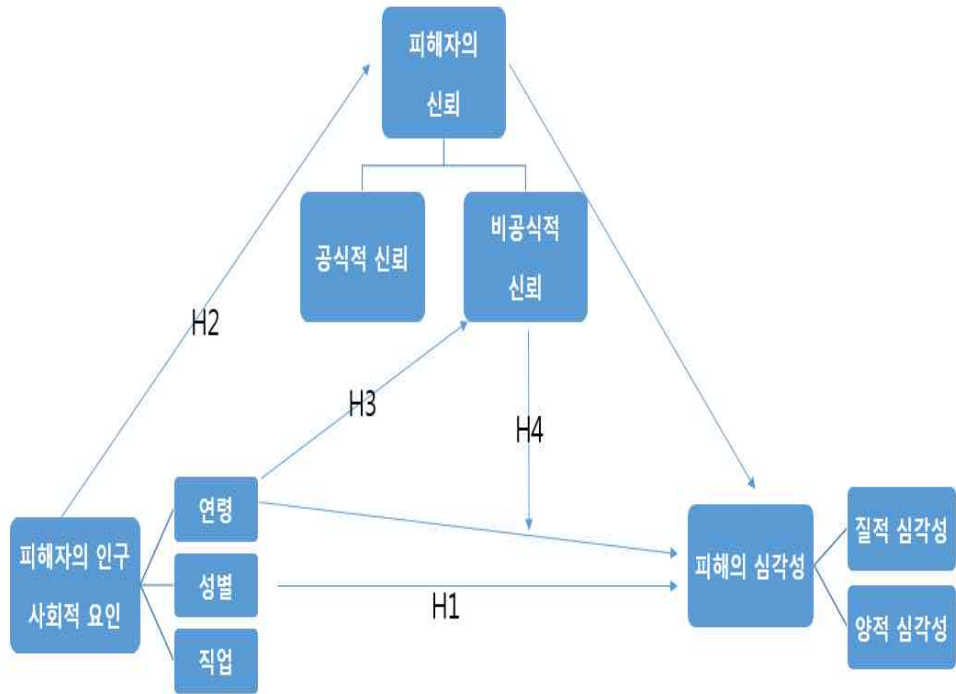
제2절 연구분석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생활양식/노출이론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생활양식과 기대역할이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모델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이익을 매개로 범죄피해의 심각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모형을 바탕으로 사기죄 피해자들 및 사기죄 발생 피해액 및 수사결과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뢰 유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발생 피해의 관계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한다. 또한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소, 피해자의 신뢰, 기대이익에 따라 종속변수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2. 연구 가설 설정

위 모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기죄의 피해 정도가 상이할 것이다. 사기죄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특정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사기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직업, 피의자와의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사기 범죄 형태는 미성년/청년층/중년층/노년층 연령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행태가 다를 것이다. 미성년 및 청년층의 경우 소위 인터넷 ‘중고나라’ 등의 사이트에서 물품거래 사기가 주를 이루고 청년층의 경우 대출사기, 중년층의 경우 투자, 차용사기, 노년층의 경우 유사다단계사기 등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양식이론에 따르면 이는 연령

에 따라 피해자의 사회적 역할이 다르고 일상생활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년층의 경우 특히 별다른 수입이 없고 연금과 목돈 이외 마땅히 투자수단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갯돈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주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 일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에서 주로 자본금을 유치하거나 다단계 회사 등을 운영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진다.

둘째, 피해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유형의 신뢰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의 유형은 공식적 신뢰와 비공식적 신뢰로 구분하고, 공식적 신뢰란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공증서, 투자 약정서 등이 해당되고 비공식적 신뢰란 공식적 신뢰 이외에 연고 집단을 중심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설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생활양식과 기대역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 네트워크는 그들의 생활 배경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예컨대 고령의 피해자가 청년층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같은 연고 집단에 근거한 신뢰가 클 것이다.

셋째, 피해자가 노년층일수록 다른 연령층보다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한다. 이 가설의 경우 다소 탐색적인 의미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갯돈사기 ‘의 경우 계주가 계원들의 돈을 횡령하여 발생하는 형태로 발생하는데, ” 계 “는 우리 민족 고유의 상부상조 모임으로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계는 친분과 친목으로 구성되고,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지는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계주로 포섭하여 사기를 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정’에 약하고 내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 지연, 학연, 혈연 등의 문화는 청년층보다는 노년층이 좀 더 강한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구 가설로서 피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일수록 다른 연령층보다 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목돈 및 노후자금 등 투자금이 있고, 정보에 어두운 경우가 많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피의자들에게

는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력적인 범죄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일수록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나 사기 범죄의 경우 지능범이자 재산범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노년층은 연금이나 퇴직금, 노후 자금 등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에서 피의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범죄 대상이다. 따라서 노년층일수록 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으며, 아래 연구 분석에서는 신뢰와 기대이익을 매개로 하여 노년층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가설을 설명하고자 한다.

3. 연구 분석 방법

먼저 각 독립변수별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이변량 통계를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통계를 통하여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독립변수들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피해의 질적 심각성과 피해의 양적 심각성으로 설정하였다. 피해의 질적 심각성과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한다. 종속변수 피해의 양적 심각성과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비공식적 신뢰의 경우 피해자의 신뢰가 연고 집단에 근거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식적 신뢰에서는 차용증, 계좌입출금내역, 계약서와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나 비공식적 신뢰의 경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피해자의 신뢰를 순차적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연고 집단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피해자의 신뢰가 연고 집단에 근거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변수를 조정하였다. 연구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변수 및 분석 방법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분석방법
독립 변수	성별	피해자의 성별	기술통계
	나이	피해자의 나이	
	직업유무	피해자의 직업 유무	
	공식적 신뢰	피해자의 공식적 신뢰	
	비공식적 신뢰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연고 집단)	
종속 변수	기대이익	피해자의 기대 이익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선형 회귀분석
	수사결과	피해의 질적 심각성	
	피해금액	피해의 양적 심각성	

본 연구에서는 사기 범죄 피해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따른 사기 범죄 발생 여부에 대한 분석은 어렵고, 다만 사기 범죄 피해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기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피해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선정하면서 사기 범죄 피해를 단순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하기 위해서 수사결과를 변수로 선정

했다.

사실 사기 범죄는 기소율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하여 극히 낮은 편이고, 민사분쟁과도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기 범죄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보다 피해자들이 좀 더 심각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된 경우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된 경우를 나누고,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사기 피해가 질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피해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은 동일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만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질적인 변수인 수사결과는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고, 양적인 변수인 피해금액은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기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서 사기 피해 금액과 수사결과를 설정하였다. 수사결과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 피의자에 대하여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이다. 사기죄의 경우 기소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소의견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되는 사건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보통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는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인 경우가 많으며 고소사건 수와 피해자의 수를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수사결과는 혐의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불기소된 비율이 높다. 법무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대부분 50%대로 60%가 넘지 않았다. 특히나 사기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30%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사결과를 기소와 불기소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인지, 실제로 형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분할 척도가 될 수 있다.

연구 분석 과정에서 기소의견으로 종결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된 사건의 피해자들보다 사기 피해가 질적으로 더 크다고 간주하였다. 사건의 기소여부 및 피해금액은 사기 피해의 정도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표 5〉 사기 피해 금액(단위별)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피해금	100만원 이하	27	27.0	27.3
	1000만원 이하	25	25.0	52.5
	1억원 이하	33	33.0	85.8
	10억원 이하	11	11.0	97.0
	100억원 이하	4	4.0	100.0
	합계	100	100	100
	평균 : 7971.21(만원) , 표준편차 : 20831.602			

피해금의 경우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만원 이하가 27%, 1,000만원 이하가 25%, 10억원 이하가 11%, 100억원 이하가 4%를 차지했다. 피해금의 총 평균은 79,712,100원으로 대략 8,000만원 정도로 확인되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사기’ -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와 같이 물품을 배송해주기로 하며 대금을 받고는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일선 관서에는 통상적으로 사기 범죄 피해의 양적 심각성은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 추후의 공판에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예상된다. 이 경우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 때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피해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신병 구속 여부를 검토하곤 한다. 물론 피해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거나 동종 전과가 많이 있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사건 수사 결과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가 63%, 불기소의견은 37%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 중에는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 까지 기소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을 하는 것) 처분도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기소로 종결된 사건이 불기소의 경우보다 약 1.5배가량 높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소사건으로 접수된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사기 사건의 기소율은 50%가 채 되지 않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나타났다. 즉 표본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기소율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피해자 1명당 사기 사건 피해의 심각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사결과를 설정하였고, 위 통계치의 경우 피의자 혹은 사건 1건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유사 수신 범죄 혹은 다단계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다)에서도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소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검찰 및 공판 단계에서는 동일한 피의자 혹은 동일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모두 병합하여 기소 및 판결 처분을 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통상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통계기관에서 발표되는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대개 피의자를 기준으로 혹은 사건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기소율을 산출하였기에 산출 단위가 다르다. 변수 설정을 통상적인 통계 산출 기준과 다르게 한 이유는 피해자의 관점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6〉 사건 수사 결과

구분	수사결과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기소유무	불기소	37	37	37
	기소	63	63	100
	합계	100	100	

2. 독립변수 기술통계분석

사기피해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요인(성별, 연령, 직업)과 피해자의 신뢰(공식적 신뢰, 비공식적 신뢰), 피해자의 기대 이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44%, 여자가 53%, 대부회사가 3%를 차지하였다.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51.64세이며, 연령층의 경우 중년층이 60%로 가장 많았고, 노년층 26%, 청년층 11%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연령에 대해서는 대부회사는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며, 청년층의 경우 30세 미만, 중년층의 경우 30세 이상 60세 미만, 노년층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50세를 기준으로 연령층을 나누어 볼 경우에는 청·중년층은 40%, 중장년층의 경우 57%를 차지하였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및 주부와 같이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남녀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연령의 경우 약 50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층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60세 미만이 주된 피해자 계층이었고 노년층의 경우 중년층의 절반 정도였다.

〈표 7〉 피해자의 성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 별	남자	44	44	44	44
	여자	53	53	53	97
	회사	3	3	3	100
	합계	100	100	100	

〈표 8〉 피해자의 연령층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연령 층	청년층 (30세 미만)	9	9	9
	중년층 (30세 이상)	60	60	69
	노년층 (60세 이상)	28	28	97
	대부회사	3	3	100
	합계	100	100	100

n=100(유효 97, 결측 3)

평균 연령 : 51.6495

표준편차 : 14.87520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술 통계만을 분석했을 뿐이고, 실제로도 노년층의 인구가 중년층보다는 적을 것이기에 인구 비율 당 피해 사례를 계산하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연령층별로 범죄 피해의 양적, 질적 심각성은 단순히 피해를 당했다는 것에 비해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통계 분석은 아래 이변량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피해자의 직업은 무직이 43%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16%, 회사원 13%, 주부 10%, 학생 5%, 대부회사 6%, 기타 7%로 나타났다. 주부의 경우 무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타 직업으로는 종교인 등이 있었다. 피해자의 성별에서 대부회사가 3명이고 피해자의 직업상으로는 대부회사가 6명으로 나타나는데, 회사 자체가 피해자인 경우 성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별을 회사로만 설정하였다. 대부회사가 사기 범죄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대부분 비면식범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대출이 필요한 고객이 전단지 및 인터넷 등의 대출 회사 광고를 보고 회사의 대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및 대출 조건 확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고객의 계좌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후에 대출을 한 직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대부회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화로써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별을 대부회사로 설정하였다. 기타 변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는 목사, 승려와 같은 종교인 등이 있었다.

〈표 9〉 피해자의 직업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직업	무직	43	43	43
	학생	5	5	48
	주부	10	10	58
	회사원	13	13	71
	자영업	16	16	87
	대부회사	6	6	93
	기타	7	7	100
	합계	100	100	100

2) 피해자의 신뢰유형

피해자들의 신뢰 유형은 공식적 신뢰와 비공식적 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식적 신뢰의 경우 ‘없음’이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차용증이 10%, 입금확인증이 9%, 계약서가 27%를 차지하였다. 공식적 신뢰의 경우 계약서>입금확인증>차용증>없음을 순으로 하여 법적 수단의 유효성을 설정하였다.

계약서를 매개로 하는 사기 범죄의 경우가 단순 차용증이나 입금확인증보다는 공식적인 신뢰가 높다고 가정하였다. 입금확인내역은 계좌입출금내역으로 단순히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채무에 관련된 책임은 나타나지 않기에 계약서보다는 낮은 수준의 신뢰로

판단하였다. 차용증의 경우 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자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공신력이 떨어져 가장 낮은 신뢰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중 흥미로운 사실은 공식적 신뢰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보이스피싱’ 과 같이 전화를 통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구하게 하거나,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대출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사건이 많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공식적 신뢰도 발견되지 않고 순수하게 피의자의 기만에 의해서 사기 범죄가 발생한다. 비공식적인 신뢰도 물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10〉 피해자의 공식적 신뢰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공식 적 신뢰	없음	54	54	54
	차용증	10	10	65
	입금 확인증	9	9	73
	계약서	27	27	100
	합계	100	100	

비공식적 신뢰의 경우에는 ‘지인관계’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없음’이 29%, 직장동료가 7%, 연인이 3%, 지인이 4%, 종교가 4%, 계모임이 7%, 혈연관계가 10%를 차지하였다. 비공식적 신뢰의 하위 변수 간에 상호배타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지인관계는 ‘단순한’ 지인관계로 설정하였고 지인관계 중에서 직장동료나 연인, 지인, 종교 등의 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다른 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11〉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비공식 적 신뢰	없음	29	29.0	29.0
	지인	36	36.0	65.0
	직장	7	7.0	72.0
	연인	3	3.0	75.0
	지연	4	4.0	79.0
	종교	4	4.0	83.0
	계	7	7.0	90.0
	혈연	10	10.0	100.0
	합계	100	100.0	

3. 기타변수 기술통계분석

사기 피해 유형의 경우 물품사기(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등), 보이스피싱, 차용사기(주로 지인들 간에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발생), 투자사기(부동산, 동산, 의류, 건강식품 등 물품을 대상으로 주로 다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짐), 기타사기로 분류해 보았다.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던 것은 투자사기(54%)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사기(20%), 차용사기(16%), 물품사기(7%), 보이스피싱(3%)로 나타났다. 투자사기의 비중이 많은 이유는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나 다단계 사기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타사기로는 속칭 ‘네다바이’ 사기(예컨대 약국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품을 산 것처럼 행세하며 환불을 요구하여 물품 대금을 받고는 그대로 도주하는 기법의 사기), ‘도박 사기’ (예컨대 도박판에서 표시목과 같은 화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속여서 사기 도박을 하는 경우), 대부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과 같은 유형이 있었다.

〈표 12〉 사기 피해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기 유형	물품사기	7	7.0	7.0
	보이스피싱	3	3.0	3.0
	차용사기	16	16.0	16.0
	투자사기	54	54.0	54.0
	기타사기	20	20.0	20.0
	합계	100	100.0	100.0

제2절 이변량 분석

위 각 독립변수들이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각각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먼저 이변량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각 독립변수의 범주별로 차이가 있는지 집단별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다.

1. 범죄 피해의 양적 심각성에 대한 요인

피해자의 성별, 연령층, 직업에 따른 범죄 피해의 양적 심각성(피해금액)을 분석해 본 결과, 피해자의 성별에서는 남성이 평균 피해금액이 약 1억 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사기 범죄의 피해 사례가 많음에도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600만원 가량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실행하였다가, 대출금 변제를 받지 못해 사기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표 13> 피해자의 성별과 피해금액

구분		평균(원)	빈도	표준편차
성별	남자	118,915,000	44	25966.063
	여자	51,319,800	53	15630.417
	회사	6,333,300	3	404.145
	합계	79,712,100	100	20831.602

피해자의 연령층에 따른 피해금액은 평균 약 1억 2천만원으로 중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평균 피해금액이 1백만원 정도였는데, 이는 주로 청년층이 인터넷 상 물품 거래사기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상 사회초년생으로 큰돈을 투자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본다.

<표 14> 피해자의 연령층과 피해금액

구분		평균(원)	빈도	표준편차
연령층	청년층 (30세 미만)	1,403,300	9	256.577
	중년층 (30세 이상)	125,990,200	60	25916.507
	노년층 (60세 이상)	13,577,500	28	2012.989
	대부회사	6,333,300	3	404.145
	합계	79,712,100	100	100

〈표 16〉 피해자의 직업과 피해금액

구분		평균(원)	빈도	표준편차
직업	무직	41,076,000	43	16004.192
	학생	162,000	5	9.628
	주부	203,019,000	10	32715.218
	회사원	32,895,400	13	6269.982
	자영업	179,262,500	19	32980.664
	대부회사	39,500,000	3	3645.682
	기타	91,585,700	7	14497.782
	합계	79,712,100	100	20831.602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피해금액을 살펴보아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청년층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피해금액이 16만2천원에 불과하였다. 피해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직업군은 약 2억 3 백만원으로 주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억 7 천만원 가량의 자영업자, 4 천만원 가량의 무직자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공식적 신뢰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 피해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계약서라는 공식적 수단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공식적 신뢰가 없는 경우가 피해금액이 약 8,000만원으로 계약서 다음으로 양적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공식적 신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공식적 신뢰 수단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노인들 사이에서는 법적인 절차보다는 정에 의존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표 16〉 피해자의 공식적 신뢰

구분		평균	빈도	표준편차
공식적 신뢰	없음	81,007,000	54	21096.285
	차용증	34,972,000	10	2221.095
	입금 확인증	5,505,600	9	715.797
	계약서	118,428,100	27	26474.885
	합계	79,712,100	100	20831.602

피의자의 비공식적 신뢰를 연고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금액이 범주별로 평균 피해금액이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났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지 검정을 시도하고자 연고 집단의 유무에 따라 집단별 피해금액을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5% 유의수준에서 매우 큰 T 값이 확인되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17〉 피해자의 연고 집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연고 집단	없음	75	4081.89	12285.051
	있음	25	19639.16	33699.228

〈표 18〉 연고유무에 따른 집단별 피해금액 차이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차이의 95%신뢰구간	
	T값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 차이	표준 오차	상한	하한
피해 금액	-3.402	98	.001	-15557.267	4572.832	-24631.902	-6482.631

2. 범죄 피해의 질적 심각성에 대한 요인

범죄 피해는 단순히 피해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더구나 사기 범죄의 경우 범죄 수익 회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범죄 피해의 양적 측면 이외에도 다른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 피해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였고 그 중 수사결과를 참고하였다. 수사결과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고 가정하였다.

피해자의 직업유무와 연령층, 신뢰 유형에 따른 범죄 피해의 질적 심각성(수사결과)을 분석해 본 결과, 먼저 직업의 경우 무직자의 기소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상당히 높았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의 심각성이 뚜렷하였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9〉 피해자 직업 유무에 따른 수사결과

구분	수사결과	직업유무		전체
		무직	기타	
기소유무	불기소	15	22	37
	기소	43	20	63
	합계	58	42	100

피해자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중년층과 장년층의 범죄 피해가 두드러졌고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기소 확률이 약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기소 확률이 20%가 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장년층의 범죄 피해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0> 피해자 연령층에 따른 수사결과

구분	수사결과	연령층				전체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대부회사	
기소유무	불기소	8	21	6	2	37
	기소	1	39	22	1	63
	합계	9	60	28	3	100

피해자의 공식적 신뢰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을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사기 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낮았다. 공식적 신뢰 수단 중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명시적으로 기재해 놓은 계약서보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용증 및 입금 확인증이 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더 높았다. 즉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식적 신뢰 수단 확보가 중요하며, 되도록 계약서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표 21> 공식적 신뢰 유형에 따른 수사결과

구분	수사결과	공식적 신뢰				전체
		없음	차용증	입금 확인증	계약서	
기소유무	불기소	21	0	0	16	37
	기소	33	10	9	11	63
	합계	54	10	9	27	100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를 연고 집단을 중심으로 피해의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연고 집단의 매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질적 피해가 심각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았다. 전자의 경우 수사결과가 기소인 경우가 96%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4%에 불과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양측 모두 50% 정도로 나타났다. 물론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과대평가 된 점이 있지만, 비공식적 신뢰 유형이 사기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유효한 설명 변수임은 분명해 보인다.

〈표 22〉 비공식적 신뢰 유형에 따른 수사결과

구분	수사결과	연고 집단		전체
		없음	있음	
기소유무	불기소	36	1	37
	기소	39	24	63
	합계	75	25	100

제3절 회귀분석

위와 같이 이변량 분석을 통하여 각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에 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 일부 집단별로 사기 범죄 피해의 심각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나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변수 중 연령층 변수와 피해자의 신뢰 부분에서 독립변수의 범주 집단 간에 차이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분석에서 더 나아가,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이란 하나나 그 이상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의 추정을 할 수 있는 통계기법을 말한다. 하나의 독립변수를 가진 회귀분석에서, 하나의 방정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결합분포를 보여 주는 지점들의 분포구성을 통해 지나가는 하나의 선을 설명하고 있다. 이 방정식은 $Y_i = a + bX_i + e_i$ 라는 형태를 갖는다. X_i 는 독립변수의 값을 말한다. a 는 Y축을 지나가는 회귀선의 지점이며, b 는 회귀선의 기울기이고, e_i 는 회귀선 예측의 오차이다.

회귀선에서 가장 유용한 값은 기울기 b 이며, 이 값은 종속변수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X 가 피해자의 연령을 나타내고 Y 가 피해금액을 나타낸다면, b 의 값이 1.5라고 가정하면 평균적

으로 피해자의 연령의 증가는 소득의 1.5 배 만큼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적합한 회귀선은 상관계수를 통하여 설명되며, 그 값은 r 로 나타낸다.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를 가진 회귀모델의 경우에는 R 이 된다. 상관계수의 제곱 r^2 , R^2 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에서의 분산의 정도를 나타낸다. 회귀계수 b 가 Y 에 대한 X 의 영향을 설명한다면, 상관계수는 가설모델이 자료에 실제로 얼마나 잘 적합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상관계수와는 달리 회귀계수는 사회학에서 인과적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만약 독립변수가 한 단위에서 증가한다면 종속변수는 많은 단위에서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또한 회귀계수는 상관계수와는 달리 수학적으로 상관계수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며, 이 변형에 따라 변수들의 상대적 변화에 의존하는 사회학에서 인과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회귀계수를 통계적 관계에서 비율이 증대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모형에는 사기피해의 심각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다중공선성 진단

위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사이에 강한 상관성이 발견되면 독립변수의 설명력에 편향(bias)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모두 분산팽창요인(Variance of inflation)이 최대 1.5를 넘지 않는 등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성별	.869	1.151
나이	.708	1.413
직업유무	.715	1.399
연고 집단	.910	1.099
공식적신회	.939	1.065
기대이익	.834	1.199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로 설정된 수사결과(사기 피해의 심각성)는 질적 변수이기에, 회귀 형태가 선형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영어: logistic regression)는 D.R.Cox가 1958년에 제안한 확률 모델로서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로지스틱 회귀의 목적은 일반적인 회귀 분석의 목표와 동일하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함수로 나타내어 향후 예측 모델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종속 변수를 설명한다는 관점에서는 선형 회귀 분석과 유사하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 분석과는 다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일종의 분류(classification) 기법으로도 볼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의 유형은 이항형 또는 다항형이 될 수 있다.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의 경우 종속 변수의 결과가 (성공, 실패)와 같이 2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항형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형 변수가 (맑음, 흐림, 비)와 같이 2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항형 로지스틱의 회귀 분석에

서 2개의 카테고리는 0과 1로 나타내어지고 각각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한 범주형 변수의 결과 (기소, 불기소) 로 분류될 확률을 측정하기 위해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는 일반적인 선형 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선형 회귀와 유사하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의 모델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선형 모델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항형인 데이터에 적용하였을 때 종속 변수 y 의 결과가 범위 $[0,1]$ 로 제한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종속 변수가 이진적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P(y | x)$)의 분포가 정규분포 대신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속 변수 y 의 결과는 0과 1, 두 개의 경우만 존재하는 데 반해, 단순 선형 회귀를 적용하면 범위 $[0,1]$ 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의 정확도만 떨어뜨리게 된다. 이 점에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은 단순한 선형 회귀 분석 보다 사기 피해의 질적 심각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의 모형에 입각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선 모형적합도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254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데, Hosmer & Lemeshow 검정의 경우 유의수준 (0.05)보다 유의확률(0.254)이 커야만 모형이 적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 모형의 적합성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의 계수 값은 독립변수들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종속변수가 증가한다.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종속변수는 감소한다. 독립변수들의 계수 값 중 특히나 연고 집단에서 3.177로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계수의 표준오차 값은 대부분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계수 추정치의 신뢰성에 큰 문제점이 없었다. 표준오차가 클 경우 공선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참고

하는 모형의 설명력으로서 Nagelkerke의 R^2 수치가 0.535인 것으로 볼 때, 모형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약 53.5%가량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형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분석결과 분류정확도는 80%로 이 또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실질적으로 모형으로 종속변수 발생을 얼마나 정확히 분류해내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는 선형회귀분석에서처럼 독립변수의 한 단위 증가로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로짓(logi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종속변수의 발생확률을 0과 1사이로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해석방법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불기소가 될 경우에 비해 기소가 될 확률 - 사기 범죄 피해가 심각할 경우’, 즉 ‘승산(odds)’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표 24〉 로지스틱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표준오차	P	Exp(B)
범죄피해의 질적 심각성	성별	.579	.510	.257	1.784
	나이	.040	.018	.029**	1.041
	직업유무	.081	.625	.897*	1.084
	공식적 신뢰	-.492	.234	.036**	.612
	연고 집단 유무	3.177	1.165	.006***	23.981
	기대이익	.013	.005	.006***	1.014

N = 100

Nagelkerke's R^2 = 0.535

Hosmer & Lemeshow's test : χ^2 = 10.165, df = 8, p = .254

분류정확도 : 80%

통계적 유의도 : *** p<0.01, ** p<0.05, * p<0.1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95% 유의수준에서 나이, 공식적 신뢰, 연고 집단 유무, 기대이익 4가지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0.1의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기준으로 유의성을 판단한다면 직업 유무까지도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고 집단의 단위가 1단위 변할 때(연고 집단의 유무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수사결과가 기소가 될 확률이 무려 23.981배 증가하였다. 즉 사기 범죄 피해자들 가운데 비공식적 신뢰인 연고 집단이 존재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기피해가 심각할 확률이 약 20배가량 된다는 뜻이다.

그 외 공식적 신뢰의 경우 공식적 신뢰가 1단위 증가할 때 사기 범죄 피해의 확률이 0.612 단위 늘어난다. 사기 범죄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를 1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은 부의 영향이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 신뢰의 분석 결과는 결국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신뢰보다 공식적 신뢰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밖에 나이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사기범죄 피해의 확률이 1.041단위 증가하며, 기대이익이 1% 증가할 경우 역시 사기범죄 피해의 확률이 1.014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는 90%유의 수준에서 직업이 있을 때(1)가 없을 때보다 사기 피해 확률이 0.897로 나타났다. 무직인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할 확률이 10.3% 더 크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변수인 성별은 여자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사기범죄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형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를 피해금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성별, 나이, 직업유무, 공식적 신뢰, 연고 집단 유무, 기대이익을 기준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를 1, 남자를 0으로 하는 더미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0.01% 높은 유의수준에서 연고 집단 유무가 피해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3.720, 유의확

률이 000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높은 유의수준으로 연고 집단의 유무에 따라 범죄피해금액이 4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고 집단 그 외에 성별, 직업유무, 공식적 신뢰, 기대이익 부분에서는 피해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비표준화계수 값은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두 일정한 상태에서 해당 독립변수의 계수가 1이 변할 때 종속 변수가 변하는 값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표준화계수는 독립변수들간 단위를 표준화하여 각 계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표준화계수를 표준화한 값이다. 분석 결과 연고 집단의 계수가 17982.9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고 집단의 유무에 따라 피해금액이 평균적으로 약 1억7천만원 가량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 간 영향력을 표준화하여 비교한 값에서도 연고 집단의 계수가 다른 독립변수들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선형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β)
		B	SE			
범죄피해 의 양적 심각성	성별	6157. 091	4819. 289	1.278	.205	.146
	나이	2547. 987	4914. 865	-1.06 8	.288	.059
	직업유무	-184. 560	172.7 39	.518	.605	-.130
	공식적 신뢰	465.1 53	1631. 274	.285	.776	.029
	연고 집단	1798 2.910	4833. 494	3.720	.000*	.374
	기대이익	11.02 5	35.78 0	.308	.759	.034
N = 100						
R ² = 0.164						
회귀모형의 제곱합 = 7037312011.077 df = 6, p = .011						
통계적 유의도 : *** p<0.01, ** p<0.05, * p<0.1						

4. 가설검정과 해석

위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 가설을 검정해보면, 먼저 ‘연구 가설 1’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유무에 따라 사기죄 피해정도가 다를 것이다’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자료 분석 결과 피해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사기죄 피해의 심각성이 대체로 높았다. 특히나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사기죄 피해 정도가 심각하였다. 이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고령의 피해자, 즉 보호능력이 약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 간에 있어서는 사기 범죄 피해의 유의미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뢰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2, 3 번을 위 연구 분석결과에 비추어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는 것이 나타났다. 나이와 비공식적 신뢰, 연고 집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의 비례관계가 나타났고 유의미한 통계치로 확인되었다. 비공식적 신뢰로는 단순 지인관계부터 시작하여 직장동료, 연인, 계, 혈연, 학연, 지연 등이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혈연, 지연, 계 와 같이 연고 집단에 근거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사기피해 노출도와 비공식적 신뢰의 관계에 대한 가설 4의 경우, 위 1, 2, 3,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심각한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선형로그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공식적 신뢰, 연고 집단 유무는 피해의 질적, 양적 심각성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노년층일수록 사기 범죄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그들의 신뢰는 연고 집단에 근거하고 있다. 즉 법적인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식적 신뢰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 간 정(情)에 따라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5. 사례 분석

위 통계분석에서 사용된 사례 중 신뢰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4가지 선정해 보았다. 공식적 신뢰와 비공식적 신뢰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사례 A는 피해자의 공식적 신뢰와 비공식적 신뢰가 모두 나타난 경우, 사례 B는 공식적 신뢰만이 확인되고 비공식적 신뢰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례 C는 비공식적 신뢰만 나타난 경우, 사례 D는 두 가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선정하였다.

<표 26> 신뢰 유형에 따른 사례 분석

사례	공식적 신뢰	비공식 신뢰	피해자 수	피해금액	수사 결과
사례 A	O	O	3명	8,300만원	기소
사례 B	O	X	1명	300만원	불기소
사례 C	X	O	12명	45억원	기소
사례 D	X	X	1명	760만원	불기소

사례 A는 종교 집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의류 판매 사업을 하면서 같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에게 원금에 150%, 200% 변제를 약속하고 투자를 받았던 사건이다. 피해자 들 중에는 피의자와 같이 투자유치를 하며 같이 일을 했던 자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조사 중에도 교회 자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이라며 자신은 몇몇한 일을 하였다고 항변하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자들은 3명이었지만 피해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르렀고, 아직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로 형사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사례 B의 유형과 같은 사례는 대부업체와 그 고객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난다.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피의자들은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구하려 한다. 제 2금융

권 대부회사들은 본인 확인과 재직 증명 등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자동으로 이들에게 대출금을 빌려주게 된다. 다만 피의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대부회사는 이들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대부회사에서는 몇 차례 내용증명 발송과 주소지 방문 등 민사적인 채권 확보 수단을 진행하다가 중국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죄는 당사자들 간에 일체의 비공식적 신뢰 관계가 없으며, 계약서라는 공식적 신뢰 수단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당사자들 간에 직접 대면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출 절차가 전화상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대부분 비면식범 형태이다.

사례 C 의 피의자는 택시 기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만났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의 110% 변제를 조건으로 날마다 10%의 배당금을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100만원 단위의 작은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날마다 10%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주변에 있던 가족, 친척, 지인, 동네 이웃들 까지도 투자에 끌어들였다. 피의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날마다 배당금을 주며 몇 개월 동안 이들과 같이 거주를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은 피의자를 신뢰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피의자는 이들에게 해외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하여 잠적하였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었고 약 45억 가량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던 사건이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처분할 수 있었던 재산들을 모두 사용하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 고리의 사채업을 이용하여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를 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더구나 이들은 혈연과 지연이라는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여 계약서와 같은 공식적 신뢰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사례 D의 경우 일체의 신뢰 관계없이 범행이 발생하는 사건으로, 대부분 속칭 ‘보이스피싱’ 사건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주로 피해자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며, 피의자는 이들

에게 ‘oo은행인데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인 선임 비용으로 oo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한다. 피의자들은 일정한 금액을 대포통장(노숙자나 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일정한 돈을 주겠다고 하며 개설한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린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피의자로 조사받는 대포통장 명의자들도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젊은 대학생들이 많았다.

위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은 취약 계층일수록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담당하였던 수사 사건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였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민원인의 대부분은 중년층이나 장년층을 차지하였다. 2-30대 민원인이 거액의 돈을 잃었다며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청년층에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나타나는 사기 피해가 두드러졌으며, 피해 금액도 많아야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그 외 연인 관계 사이에서 금전이 여러 차례 오가며 채무 관계가 발생하였다가, 관계가 정리된 후 채권자였던 한쪽이 채무자였던 한쪽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단순 지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데 한쪽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을 하였던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피해금이 1,00만원 이하 혹은 많아도 1,000만원 이내의 소액사건 이었고, 연고집단을 근거로 한 비공식적인 신뢰관계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던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미회수를 명목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은 수사결과상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에 일체 신뢰 관계가 없이, 일정한 대출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을 시행하는 형태로 금원이 거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르게 해석하면 비공식적 신뢰관계, 특히나 연고 집단과 같은 신뢰관계가 없을수록 사기 범죄 피해의 질적 심각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장년층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한 적도 있었고,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사기피해 진술을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고소인들 간에 지연, 학연, 혈연, 계모임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피의자는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조건대로 투자 배당금 등을 주면서 이들을 안심시키고,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매개로 하여 관계된 사람들을 끌어들었다.

박상진(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의 사기사건 범행 수법은 거의 유사하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피의자는 일정한 대상자(예를 들어, 경제사정에 어두운 주부나 노인들)들을 범죄 대상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의 투자 상품으로 접근한다. 초기에는 일정한 수익을 정확하게 지급하여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 이 기간이 상품에 따라서는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기간에 비례해 안심한 투자자들은 친척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투자를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시세가 빠르게 확장된다. 그러나 이들 유사수신들의 특징은 아무리 상환가능성을 이야기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되고 사기꾼들은 가장 수익이 극대화 될 때 털고 나간다. 이러한 사기 범행의 수법을 보았을 때, 경험적으로도 연고 집단이 이와 같은 사기범죄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점이 경험적으로도 증명된다.

이러한 투자사기의 유형으로는 광산,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수목장, 상가, 카지노 등 부동산사업이나 비상장주, 전자화폐, 해외펀드, 금융컨설팅, 증권투자업, 핀테크 사업,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게임물, 완구, 전기제품 등 제조업, 영농·협동조합 명의로 산삼·송이·블루베리 등 각종 특용작물 사업, 골동품 거래, 골드바,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되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나 생활비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제도권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상대로 불법 대부업이나 채권추심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중장년층 중에서도 직업이 없거나, 주부이거나, 퇴직을 하여 퇴직금 및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있던 노인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사기 피해를 당

하고도 형사 절차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수년을 허비하여 범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시사점

위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연령, 성별, 직업유무) 중 직업과 연령이 범죄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노인일수록 범죄피해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노인 피해자들이 비공식적 신뢰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기피해는 비공식적 신뢰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중년층일수록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년층일수록 사기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해자 예방 차원에서 대책들을 검토해보면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노인 보호 차원에서 협력치안을 구축하는 방안, 노인 독거가구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방안, 노인 사기범 집중단속활동을 추진하는 방안, 잠재적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죄 피해 예방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자의 경험에 따르면 노인피해자들 대부분은 법적 수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력에 의해서 구제를 해보려고 시간을 소비하다가 뒤늦게 수사 기관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고 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건 관련자들도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관악경찰서에서는 여성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발한 변호사들과 함께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수사민원서비스를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에도 지원해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신뢰에 대하여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비공식적 신뢰를 지양해야 한다. ‘나홀로 불링’의 저자 로버트 D. 퍼트넘에 따르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란 “나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 예컨대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묶인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내부 지향적이

며 네트워크의 배타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외부 지향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망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체성과 호혜성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공동의 대의명분을 가진 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연고 집단과 같은 폐쇄적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보다는 연계형 사회적 자본을 장려해야 한다. 저신뢰 사회로 분류되는 한국은 학연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사적 신뢰가 높고, 일반신뢰와 시민단체 신뢰 등 개방적 신뢰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과 지인, 연고단체 신뢰와 같은 협소한 신뢰보다는 일반적 신뢰를 장려하는 것이 개방 사회에 적합할 것이다.⁸⁾

셋째, 사기 범죄는 주로 비공식적 신뢰를 기반으로 나타나며, 비공식적 신뢰는 공식적 신뢰보다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 따라서 비공식적 신뢰는 범죄 피해가 어렵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공식적 신뢰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초저금리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점점 고금리를 부추기는 악질 사기범죄가 출현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사기범에 대하여 아무리 적극적인 형사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제재로는 유효한 대처를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민사상·행정상의 대응책들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계약의 해제에 의한 구제범위를 널리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식적 신뢰의 구체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들 개인적 차원의 예방책을 넘어서 이들의 범죄피해 양상을 사회 구조적 요인과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취약 계층의 범죄 피해는 경제적 양극화와 연관성이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들의 직업이 무직이거나 일반 주부들의 범죄 피해가 직업이 있는 사람들보다 피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앞서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취약 계층인 경우가 많았다. 피싱 사기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계

8) 박희봉·이희창, 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층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피해자들을 찾기는 드물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대출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다. 투자 사기의 경우 주로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한 수입이 없이 자녀들의 교육비를 벌여보겠다고 투자를 하였다는 주부,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저축해 두었으나 저금리 기조와 어려운 경기 속에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노인들. 사기범들은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접근하여 고이율의 배당금을 미끼로 이들의 돈을 편취하였던 것이다.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범죄통제에 대한 투입을 늘리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청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이라는 소위 ‘4대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경찰 인력을 증원하였다. 특히나 치안 현장이라 불리는 지역 경찰 인력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고, 수사 기관의 대응도 나날이 발전하였다. 이로써 전반적인 범죄율은 감소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범죄 통제적 요인인 경찰 인력이 증가하였고, 범죄 피해자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피해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경찰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 피해의 양극화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취약 계층의 범죄 피해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범죄 피해는 고령화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주로 투자 사기에서 발생하는 노인 피해자들은 1인 가구들이 많았다.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노인들은 사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즉시 경찰서에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들은 사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몇 개월 동안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사기범들에게 몇 차례나 전화하고, 이들의 주소지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고, 결국에는 사기범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여 수사 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동안 피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외로

출국을 하는 등 도망을 다니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사건이 장기화 될수록 수사 기관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노인 피해자들은 특히나 1인 가구의 경우 홀로 거주하며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여력이 없었다. 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1인 노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노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 이후에는 가족과 분리된다. 그러면서 이들의 정보 격차도 확대되고 결국 사기범들은 이들의 소외감을 파고들며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노인 피해자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기범들을 더 신뢰하였던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론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자의 편견이 변수 코딩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양적 통계 자료는 Text문서(피해자의 진술)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질적 자료를 양적 척도로 코딩하였다. 특히나 피해자의 ‘신뢰’ 변수를 양적으로 환산할 때, 연구자의 편견이 반영되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코딩한 신뢰변수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지인관계’의 경우 모든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종교, 지연, 학연, 계주 등의 변수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신뢰관계 강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난횟수와 상호 알게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종속변수 자체의 문제점(수사결과)이다. ‘수사결과’ 꼭 불기소라고 해서 피해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기소중지하는 경우 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거의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고, 다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진다. 결국 보이스피싱 주

범은 기소중지의견으로, 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도 기소, 불기소 판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중지(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사결과 자체는 불기소이지만, 사기 피해자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즉 기소중지 처분을 불기소처분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판단이 불명확한 케이스들 까지도 피해가 ‘적다’는 식으로 판단해 버렸다.

또한 수사결과는 사법 기관의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1차적인 경찰의 혐의 판단일 뿐이다. 이후 검찰의 기소유무, 법원의 판결, 그리고 항소 등이 진행될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결과와 다를 수 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이를 민사적인 구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자체만으로도 범죄 피해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변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핵심인 ‘신뢰’ 변수의 설명력이다. 신뢰 변수의 경우 연령 및 성별 등의 변수와 상호작용 변수를 고려할 때 오히려 신뢰 변수의 영향력이 낮아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변수 간에 중복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변수 자체의 설명력을 제고하여 연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표본 추출상의 문제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관악경찰서에서만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범죄통계 중 암수범죄를 포함시키지 못한다. 현재 경찰관서에서는 민원인이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할 때, 고소 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민원인 동의하에 반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악경찰서의 경우 고소 민원의 약 70%정도를 반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30%만을 대상으로 통계자료가 구성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은 회귀분석의 세 가지 전제조건 - 독립변수의 시간적 선행성, 변화의 동시성, 허위변수의 제거 -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요인과 피해결과를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기에 시간적 선행성과 변화의 동시성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사이에 외재적 변수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피해자의 신뢰나 인구·사회적 요인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예컨대 담당 경찰관의 시간과 노력에 따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에는 수사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관리자의 이러한 외재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귀분석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물론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방법론적으로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범죄 연구에서는 주로 공식적인 경찰 통계 혹은 검찰 통계만을 위주로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양태를 분석할 수 없었고, 범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작동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별 범죄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와 고령화 현상이 사기 범죄 피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만약 어떠한 사회적 조건들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진다면, 그러한 조건들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고령화 현상이 범죄 피해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제3절 결어

범죄학자들은 21세기에는 사기가 범죄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08년도에 발생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White-collar 범죄의 거의 대부분은 사기가 차지한다. 일선 경찰 관서에서도 경제 범죄 중에 사기 범죄는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강력범죄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기, 횡령, 배임 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충분하지 않다.

사기는 결국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갉아먹는 범죄다. 사기 범죄를

나타내는 영어 ‘Corruption’ 의 어원을 보면 ‘Cor’ 라는 어근은 ‘함께’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Rupt’ 는 ‘파멸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사기 범죄는 ‘함께 파멸 한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부패는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도 보다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사기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고 사기 범죄를 조사하는 우리 수사관들의 가치가 인정받아야 한다.

사기피해는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도와 높은 관련성이 으며, 노년층일수록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사기피해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비공식적 신뢰보다는 공식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범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연고 집단과 같은 결속형 신뢰를 지양하고 건전한 형태의 신뢰를 확립하고, 노년층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낙후되고 노후 보장이 불확실한 현 제도에서 이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김성언. 2009.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1045-107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재한. 2009. “동서양의 신뢰 : 비교 연구를 넘어 일반 이론으로”. 아카넷.

김준호 · 박성훈 · 박형민 · 신동준 · 이성식 · 장안식 · 황지태, 2015. “일탈과 범죄의 사회학”. 254-272. 다산출판사.

문형구 · 최병권 · 내은영. 2005. “국내신뢰 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 경영학연구 제40권 제1호, 2011.2, 139-186 (48 pages). 상명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상진. 2015. “불법다단계 · 유사수신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 제17집 제4호. 2015. 348. 중앙법학회.

박희봉 · 이희창. 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韓國行政學報, Vol.43 No.4. 한국행정학회.

신호진. 2008. “형법 요론”. 서울 : 법문사.

안동준. 2005. “사기죄의 성립과 피해자 책임, 그리고 한 걸음 더”.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5-30. 한국피해자학회.

유석춘. 2002. “한국의 사회적 자본: 연고 집단”. 자유기업원.

유지웅. 2015. “노인 사기범죄 피해 분석과 대응방안” .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왕혜숙. 2008. “연고 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 동양사회사상 제17집. 2008.5. 203-269(67 pages). 동양사회사상 학회

이은죽. 2004. “신뢰 :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 . 24. 집문당.

이건중 · 정영실. 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4-03, 1994.12, 17-196 (181 pages).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2008.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08, 2008.12, 1-2 (319 pages).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2009.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2009.3, 215-255 (41 pages).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종연. 2011. “경찰의 정책결정이 절도범죄통계에 미치는 영향” .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8호, 2011.12, 245-286 (42 pages). 형사정책연구원

허경미. 2006. “도시 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1~34, 한국피해자학회

허경미. 2004.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2004, 1~30. 한국공안행정학회

Clarke, R.V. 1992.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Monsey, NY:Harvard and Heston

Cohen and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588–608.

Luckenbill(1977). "Criminal Homocide AS A SITUATED TRANSACTION" , Social Problems. 176–186

Miethe, Huges and McDowell. 1991. "Social Change and Crime Rates: An Evaluation of Alternative Theoretical Approaches" . Social Forces 70(1):165

자료출처

경찰청. 2010-2015. 경찰백서

대검찰청. 2001-2014. 범죄분석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70-2040)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Abstract

A Study on the Victimization Factors of Fraud

KIM JUNG WON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seriousness of criminal victimization on victims of fraud crimes. The previous studies about fraud crimes have been conducted by focusing mainly on responses by crime investigation agencies about how to repress the criminals. However, fraud crimes are low in its recovery rate of criminal benefits, and there are remarkably low possibilities to arrest suspects than other crime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criminal victimiz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factors making the crime in the perspective of its prevention. In this study, the research was conducted about criminal victimization on victims of fraud crimes.

According to the routine activity theory or the lifestyle theory for criminal victim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riminal victims, their exposure to crimes are different. In this study, based on it, the criminal victims' age, gender, and occupation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as a fraud crime is affected by its victim's trust in its occurrence, victim's trust and expectation were additionally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dependent variables, seriousness of criminal victimization was measure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and then its relationships with independent variables were studied. For the analysis method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d amount, quantitative seriousnes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independent variables, while logistic analysis was applied for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investigation results, qualitative seriousnes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is study model,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with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age, gender, and occupation), occupation and ag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criminal victimization. As criminal victims were older, and they did not have occupation, degree of damages by fraud crime was more serious. Second, as the victims were older, they depended on informal trust more than formal one. Formal trust is based on legal authorities such as debt acknowledgement or agreement while informal trust is based on social relations between criminal victims and offenders. For forms of informal trust, there are simple friends, colleagues, romantic relationships, mutual-aid society, blood ties, school ties, and hometown ties. Among them, trust based on connection groups such as blood, hometown or school ties were remarkably shown in the aged victim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informal trust by victim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eriousness of criminal victimization.

Based on these analy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made. First, criminal victimization of the vulnerable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polarization. As seen in the analysis

results, in cases that the victims had no occupation or ordinary housewives had more serious damages than those who had their own occupation. In particular, for victims of 'voice phishing' fraud crimes, there were majority of victims with low income or low credit class. Second, criminal victimization of the vulnerable can be interpreted as an aspect of aging phenomenon in the population. Because of phenomena of aging society and smaller family, as the elderly who reside alone are increase, crimes against them are also increasing.

The solutions for policies on victims of fraud crimes are as follows: First, it necessitates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to crimes such as the elderly, and to build the network for them. Second, it is necessary to avoid informal trust formed in a closed group. Informal trust based on connected groups are internal-oriented, and has a trend to strengthen exclusive identity and homogeneity of networks. Third, fraud crimes occur based on informal trust of criminal victims. Therefore, in the victim's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o secure remedies of formal trust with legal authorities than to depend on informal trust from connected groups in order to treat the fraud criminals.

Keywords: Fraud, Criminal Victim, Formal Trust, Informal Trus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riousness of Criminal Victimization